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5. 11. 4.(화) 17:30
(지면) 2025. 11. 5.(수) 조간

지방재정 확충과 성과 중심의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인다

- 행정안전부, 17개 시·도와 함께 ‘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’ 개최
-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및 2026년 지방재정 운용방향 논의

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11월 4일(화) 정부서울청사에서 ‘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’를 개최했다.
-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, 민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으로, 201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.
- 올해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가 확정·발표됨에 따라, 지방재정·세제 분야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으로써 「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」 안건을 발표했다.
- 먼저, 국세-지방세 비율 7:3 달성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상향, 지방교부세율 법정률의 단계적 인상 등 다양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.
- 다음으로,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주도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규모와 이관대상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운용을 뒷받침한다.
- 아울러, 지방자치단체 예·결산안 주민 공개, 예산 심의기간 확대 등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「지방재정법», 「지방자치법」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.

○ 향후, 행정안전부는 민간 전문가, 관계부처,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‘범정부 재정분권 TF’를 구성·운영해 구체적인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.

□ 이어서, 행정안전부는 적극적 재정운용과 성과중심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「2026년 지방재정 운용방향」을 발표했다.

○ 우선, 회복과 성장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강조했다.

-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지방재정을 민생안정·전략산업 등 핵심 과제에 집중투자하고, 예산 집행률뿐만 아니라 집행규모도 함께 관리해 지방재정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.
- 이를 위해, 행정안전부는 국가와 달리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어 집행이 어려웠던 ‘시설비’ 예산을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개선해 지방재정의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.

※ (예시) A도로 공사가 민원 등으로 지연되어 당해연도에 시설비를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, 동일 정책사업 내 예산이 부족했던 B도로 건설에 예산을 변경해 사용

○ 아울러, 투입된 재원이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정관리를 강화한다.

- 집행지연, 유사·중복사업은 통·폐합 또는 사업방식을 변경하고, 불필요한 경상경비 지출이나 사업 공모는 과감히 축소해 절감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되도록 예산 원점 재검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요청했다.
- 또한,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,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평가 대신 총괄부서나 외부기관이 평가를 수행하는 등 성과기반으로 재정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.

○ 한편, 행정안전부의 「2026년 지방재정 운용방향」에 발맞춰, 인천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는 예산절감 추진사례 등 지방재정 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다른 지방정부와 공유했다.

- 윤호중 장관은 “재정분권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, 지방이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책임 있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토대”라며,
- “이번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정부와 함께 모색한 재정분권 방안을 향후 범정부 차원의 논의로 이어가, 새 정부 재정분권이 반드시 실현 되도록 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수경 (044-205-3702)
		담당자	사무관	신지희 (044-205-3705)

